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한일평화포럼 공동 세미나

한반도 평화공존과 한일협력 방안 모색

2026년 8월 19일(수) 14:00~17: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한일평화포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한일평화포럼 공동 세미나

한반도 평화공존과 한일협력 방안 모색

2026년 8월 19일(수) 14:00~17:30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한일평화포럼

프로그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한일평화포럼 공동 세미나

한반도 평화공존과 한일협력 방안 모색

시간	세부내용	
14:00~14:40	개회사	이수훈 한일평화포럼 이사장(전 주일대사)
	환영사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전 통일부 차관)
	축사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주일대사)
		민홍철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14:40~15:40	1세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공존과 평화구조로의 전환
	사회	오태규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전 주오사카 총영사)
	발표	조용근 경남대 초빙교수(전 국방부 대북정책기획관)
		조봉현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공동대표(전 IBK기업은행 부행장)
	토론	권혁철 한겨레신문 기자
		윤은주 (사)뉴코리아 대표
15:40~15:50	휴식	
15:50~16:50	2세션	한일관계: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
	사회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발표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전 주오사카 총영사)
		이기태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토론	소영화 중부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6:50~17:30	종합토론	
	사회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전 통일부 차관)
	패널	권혁철 한겨레신문 기자
		윤은주 (사)뉴코리아 대표
		조봉현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
		조용근 경남대 초빙교수
		소영화 중부대 교수
		이기태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조성렬 경남대 초빙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목 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한일평화포럼 공동 세미나

한반도 평화공존과 한일협력 방안 모색

1세션	1주제	MDL 국경화 조치에 따른 남북 군사충돌 위험과 대책방안 조용근(경남대 초빙교수, 전 국방부 대북정책기획관)	3
	2주제	남북대화 재개 시 인적·물적 교류협력의 추진방안과 로드맵 조봉현(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공동대표,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	17

2세션	1주제	동북아 질서재편기 한·일 안보협력의 쟁점과 향후 과제 — 대화 복원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공동성장 — 조성렬(경남대 초빙교수, 전 주오사카 총영사)	43
	2주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 이기태(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5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한일평화포럼 공동 세미나
한반도 평화공존과 한일협력 방안 모색

1세션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공존과 평화구조로의 전환

MDL 국경화 조치에 따른 남북 군사충돌 위험과 대책방안

조용근(경남대 초빙교수, 전 국방부 대북정책기획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한일평화포럼 공동 세미나

前 국방부 대북정책관 조 용 근
경남대학교 초빙교수

MDL 국경화 조치에 따른 남북 군사충돌 위험과 대책방안

제 81주년 8.15 광복절 경축사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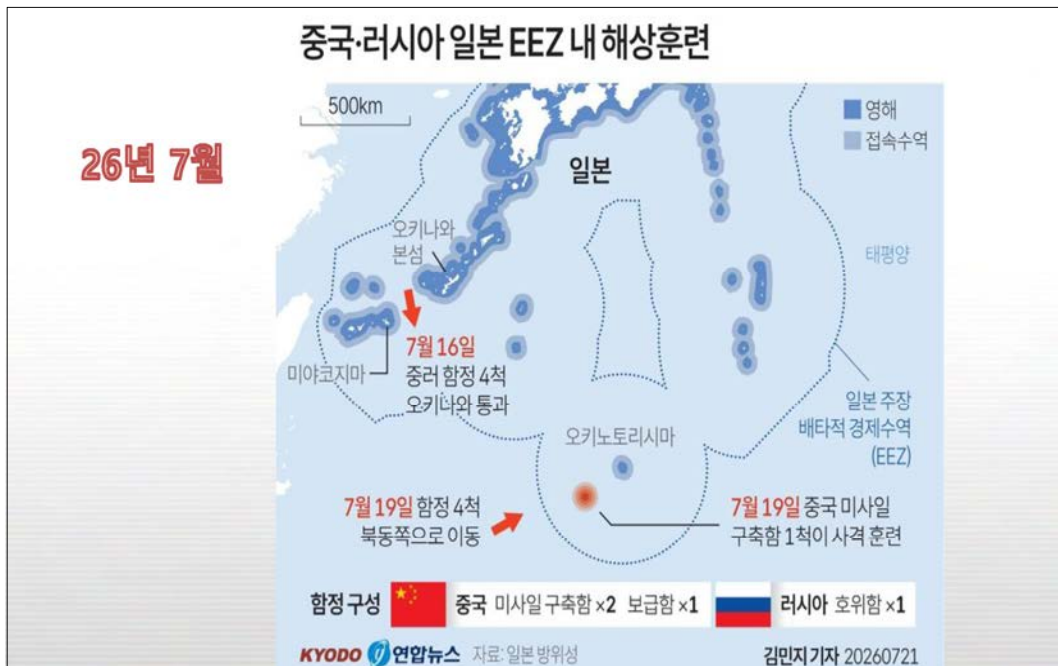
- ☑ 위기·확전방지를 위한 여러 겹 안전장치 마련
- ☑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 시행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

- ☑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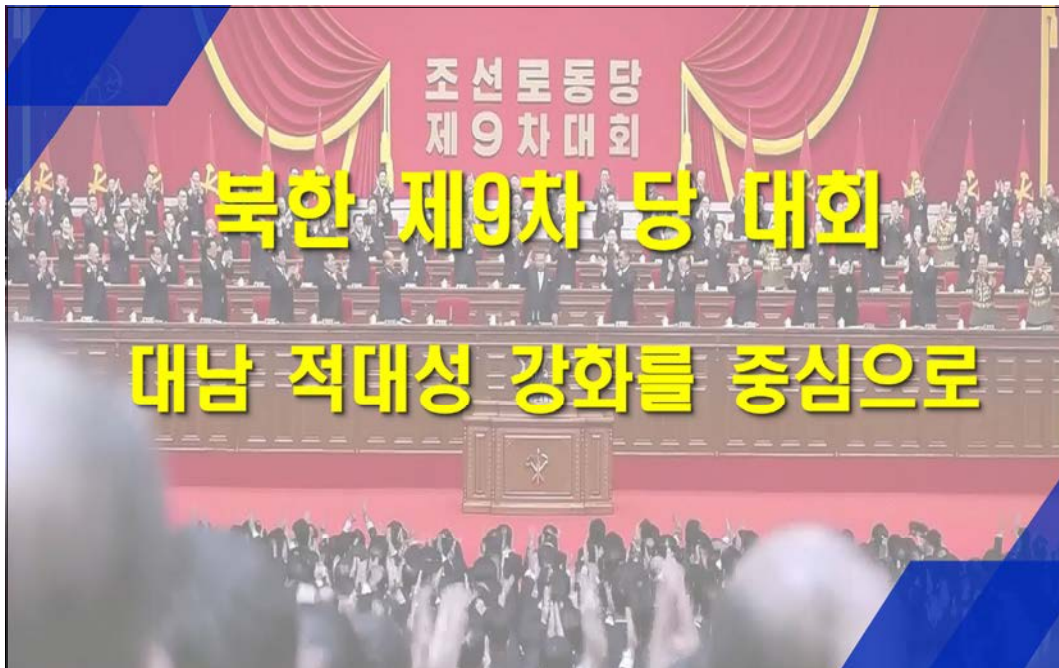
글로벌 복합위기 가속화





북한의 전략적 지위 상승

- (북러협력) 대규모 북한군 파병에 따라 첨단 군사기술 · 무기체계 이전
 - 8700톤급 핵잠수함, 정찰위성, 최첨단 드론 등 **전략무기 · 재래식무기** 지속 강화
 - 제11군단(폭풍군단), 공병부대의 실제 전장 투입을 통해 **현대전에 대한 실전 경험 축적**
 - 러시아의 무기판매 대가로 100억달러(약 15조 3천억) **경제적 이익 달성**
- (북중협력) 북중정상회담시 경제협력에 이어 처음으로 군사협력 합의
 - 처음 **북 · 중 · 러의 두만강 하구 개발 합의** ➡ 북극항로 주도권을 위한 중국 포석
 - 중국의 전략적 침묵을 활용하여 **핵보유국 지위와 적대적 두 국가론의 공고화**
- (북한 내부) 러시아 파병 효과로 인해 3년 연속 3%대 경제성장 달성
 - 작년 GDP 규모가 38조 2640억원 ➡ **UN 대북제재 본격화되었던 2017년 경제규모 상회**
 - 러시아 관광객 증가로 숙박, 음식점, 교통망 확충 등 **성장세 지속, 중국 관광객 추가 예상**



북한의 전략노선 (9차 당대회)

- ✓ [군사] 핵무력 확대 강화, 대남 타격수단 배치
- ✓ [내부] 자력갱생, 新 5개년 계획
- ✓ [대남] 적대적 두 국가론 고착화
- ✓ [대외] 중리 전략적 협력 강화 지속
- ✓ [대미] 핵보유국 인정하 조건부 대미 협상 추진



현 정세를 핵요소 동반 침략적 블록 확대 인식

➡ **북중리 협력 강화 + 대남 실전무기 배치·운용 등 적대성 강화**

북한의 전략노선 (9차 당대회시 대남 군사분야)

- ✓ △ 핵무기 증산 △ 핵운용 수단·활용공간 확장 △ 핵무력 항시 준비태세
△ 핵억제력 운용 훈련을 통한 핵무력 실전화 △ 해군 핵무장화
- ✓ 신 비밀병기·특수전략자산으로 △ 수중·지상 ICBM △ 인공지능 무인공격 종합체
△ 위성공격 자산 △ 지휘중추 마비 전자전 △ 정찰위성 언급
- ✓ 남북 국경선 빠른 기간내 △ 요새화 △ 경계태세 △ 화력체계 보강
- ✓ 600·240마리 방사포, 작전전술미사일 배치



제8차 당대회시 제시된 △ 핵무기 소형화 △ 극초음속 미사일 △ 고체 ICBM
△ 핵잠수함 등 모두 달성 ➡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 전수 가능성

북한 대남용 미사일 집중 발사(총 10회)

- ✓ 4. 19일 산포전투부(특수탄) 시험 발사
 - 축구장 18개 크기 / 전방 4개군단장 현장 참관
 - ✓ 5. 26일, 240밀리 방사포 + 탄도미사일(특수탄)
+ 전술 순항미사일(자폭 드론) 섞어쏘기
 - 초정밀 자치항법체계 + 지형 대조항법 체계
 - 종말 지능유도기능(AI) 도입
 -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여단 배치
 - ✓ 6. 25일, 240밀리 방사포 + 탄도미사일(특수탄)
+ 155밀리미터 자주포(65km 연장탄) 섞어쏘기
- ➡ 유사시 핵위협하 장사정포, 방사포, 미사일
+ 드론 등 북한판 섞어쏘기 예상



북한 전방지역 화력체계 강화 (전술핵탄두 탑재 가능)

- ✓ 23. 1. 1. 600밀리 방사포 30문 최초 증정식 및 실전배치
- ✓ 26. 1. 27. 600밀리 방사포 4발 시험발사, 정밀 유도체계 탑재 주장
- ✓ 26. 2. 18. 9차 당대회 계기 600밀리 방사포 50문 대규모 증정식
- ✓ 26. 3. 14. 김정은 참관하 600밀리 방사포 12문 일제 사격훈련
- ✓ 전술핵탄두(화산-31) 탑재 가능 주장 (23. 3월 전술핵 무기체계 공식 선언)

➡ 김정은, “600밀리, 240밀리 방사포 체계를 매년 늘려 집초공격 시행”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 평가

- ✓ 정찰형 드론 셋별-4형, 공격형 드론 셋별-9형
 - 고성능 센서 · 운용체계는 아직 미흡 평가
- ✓ 전술형 드론 급성 : 러시아 자폭드론 란셋에서 파생
 - 24년 8월 K2 전차모형 타격 장면 최초 공개
 - 25년 9월 AI 기술 탑재 주장
 - 이동가능거리 4~50Km, 최대 시속 300Km
- ✓ 작년 11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북한 노동자 1만2천여명이 샤헤드 자폭 드론(2천Km) 공장 파견”

➡ 북한은 러우전쟁 경험을 통해 중,대형 정찰 · 공격 드론, 자폭 드론, FPV 드론 등 적극 운용 예상



북한의 해군 전력 강화 위협 평가

- ✓ 5000톤급 구축함 강건함(동해), 최현함(서해) 배치
 - 7.3일 강건함, 신포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 6.23일 최현함 취역식 서해 남포항에서 개최
 - AESA 레이더, 핵 탑재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가능
 - ✓ 전술핵공격잠수함 · 핵추진전략잠수함 동시 운용
 - 24년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 진수
 - 25년 12월 8700톤급 핵추진전략잠수함 건조 공개
 - 북한의 핵잠수함 전력화시 SLBM 과 SLCM 탑재하 동해 또는 원해에서 한국 후방에 대한 공격 가능
- ➡ 북한의 섞어쓰기 공격은 TEL 지상발사 체계와 함께 해상 · 수중에서 동시 · 입체적 공격 예상



군사분계선(MDL)에 대한 북한의 국경선화 관련

- 현재 DMZ내에는 북한군 · 한국군 · 유엔사 3개의 MDL이 존재
 - 1953년 정전협정 당시 MDL을 따라 1292개의 표식물 설치
 - 약 7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자연적, 인위적 훼손으로 현재 181개 식별
 - 유엔사는 2014~16년간 MDL Project를 통해 표식물 위치를 GPS 좌표로 변환
 - 그러나, 현재까지 남 · 북 · 유엔사간 군사분계선을 현대 측지계로 변환 작업 미실시
 - 남 · 유엔사는 GPS 위성항법체계 사용 반면, 북한은 글로나스 러시아 체계 사용
 - ☞ 9 · 19군사합의 당시 시범철수 GP에 대해 남북간 상호 확인 제한
 - 우리 군은 북한군 MDL 침범시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방송 · 경고사격 실시
 - ☞ 북한은 자신들의 MDL 국경선 구축에 따라 계속 침범해야 하고, 우리 군은 경고사격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구조적 · 지속적 긴장 불가피





군, '실란 미장착'·'무인기 소동'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 ✓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 직무배제 조치
- ✓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실탄 미장착 논란 관련
- ✓ 軍, "정확한 조사 후 후속 인사 조치 검토"

안규백, GP 찾아 '조건반사적 대응' 주문

2026.08.13. 오후 8:06.

북한군, 동부전선 MDL 또 침범...군, 울 들어 첫 경고사격 후 퇴각

입력 2026.08.16 21:13

육군 1군단 관련 최근 논란

경계 근무시 공용화기 'K6 중기관총' 실탄 삽탄 중단

초당 6발 연사 'K4 유탄기관총' 실탄 삽탄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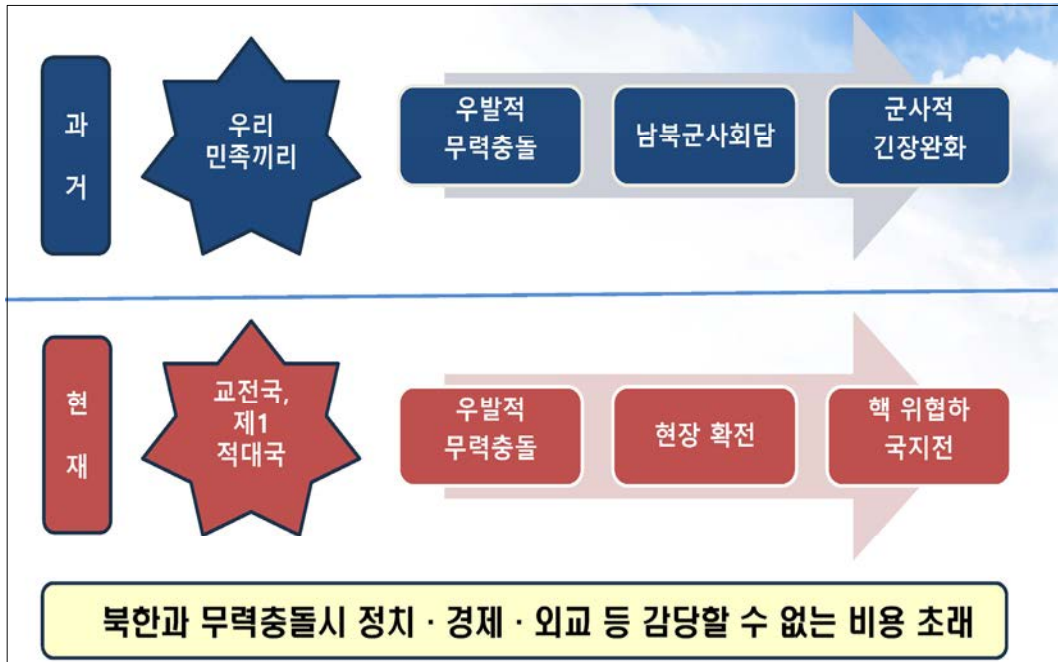
美해병대 무인기 훈련 계획 통보 받고 상부 보고 누락

북한의 MDL 국경선 변경 후: 북측 DMZ 소멸, 남측 DMZ만 완충지대



비무장지대내 군사적 긴장고조 / 무력충돌 가능성 증대

-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화 공사와 함께 전방지역 개량형 재래식 무기 증점 배치
 - MDL 국경선화 공사는 지뢰 등 사실상 장애물 추가 설치로 공격용 보다는 방어지대 추가 형성
 - 그러나, 북한군이 국경선 경계근무시 초소 전방 이동 등으로 인한 우발적 무력충돌은 적대성 강화로 확전 불가피, 우리 합참도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압도적 응징 예상
-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기재 상실
 - 과거 북한 도발시 '무력 충돌 ➡ 남북군사회담 ➡ 군사적 긴장완화' 패턴 재현 불가
 - DMZ 중기관총 미사탄 논란은 전방 지휘관의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고민도 일부 작용
- 헌법상 영토조항, 전력무기 배치 등 '자기 구속 효과' 로 북한군 과잉 대응 불가피
 - 특히 600미리 방사포, 동 · 5천톤급 구축함 배치 등으로 확전에 대한 자신감 증대
 - '민족 특수성' 배제로 인한 대남 핵무기 사용의 정당성 확보 ➡ 군사충돌시 핵위협 가능성



한반도 안정적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1 '한반도 평화공존 선언(종전선언)' 추진

- 정부차원의 북한의 **군사분계선 국경선화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립**
 - 이와 별개로 합참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위협하 도발 대응 방안 지속 수립**
- 경축사의 평화공존에 관한 3대 청사진의 실천적 차원에서 **북한의 국경선을 그 자체로 인정·발표** ➔ 이와 함께 MDL·DMZ 등 정전협정 유지 재확인
- 북한의 국경선·MDL을 **남북간 상호 불가침 선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적대행위 종식을 위한 **'한반도 평화공존 선언' 추진**
-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군사당국간 직통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위기관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군사회담을 지속적으로 제안**

한반도 안정적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2 평화공존 선언의 실질적 조치로서 남측 DMZ를 ‘MDL 평화지대’ 선포

- 북한의 국경선 설치로 북측 DMZ 소멸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정전협정에 따라 남측 DMZ 준수 불가피 ➡ 평화공존 상징적 개념으로 ‘MDL 평화지대’ 선포
- 이와 함께 합참차원에서 남북간 MDL이 중첩되는 지역에서도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군사적 조치를 규정한 DMZ 교전규칙 재검토
- DMZ내 북한군의 경계작전 등 일상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경고사격 기준을 완화 ➡ 일정 수준 이상 침범 등 의도적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
- 합참차원에서 교전규칙 재검토 및 완화 조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법적 정당성과 이행력을 동시 확보

한반도 안정적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3 ‘9·19군사합의’ 상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항 복원

- 북한군도 지상완충구역내 연대급 훈련·포사격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 지상적대행위 중지조항을 우선 복원하여 군사충돌 방지에 대한 메시지 발신
 - 서해 NLL일대 해상사격중지 및 서북 5도 해병대의 내륙순환 재개 등 해상완충구역·공중 비행금지구역도 대비태세를 고려 최대한 복원 검토
 - 북한이 NLL 사격 등 군사합의 위반시에는 즉각·비례적으로 대응하고, 필요시 미군 사격장, 군단급 무인기 운용 등은 기존과 같이 유지 ➡ 단계적 철수
- ☞ 9·19군사합의 복원은 북한의 선의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접경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경제활동과 전략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안보전략

한반도 안정적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전략

4 중국·러시아 등 대북 우회접근을 위한 ‘新북방정책’ 추진

-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상황을 고려, 중국·러시아에 대한 외교·경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대화·협력하도록 유도
- 이를 위해 북한을 통과하여 서울까지 이어지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 북한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경제협력 구상 필요
- 향후 중국이 두만강 하구를 통한 동해 진출이 성사될 경우, 2030년대 북극항로 전략적 거점 활용 예상 ➡ 전략함대 추가 운용시 동해 해양 안보 변화 불가피
- 러우 전쟁이후 한러 관계 복원과 경제 현대화 지원을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인센티브 포트폴리오 구성 ➡ 중국의 경제 종속 극복을 위해 한국 지원 절실

결론

- ✓ 북한의 MDL 국경선화는 구조적 긴장관계 형성 ➡ 무력충돌 가능성 증대
- ✓ 한반도 평화관리는 북한에 대한 양보,억제의 악화가 아니며, 강한 억제를 유지하면서 우발충돌과 오판, 확전의 위험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 ✓ 한반도 평화관리는 안보정책의 하위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인명과 재산, 경제활동과 전략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안보전략
- ✓ 따라서, 북한의 즉각적인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관리 조치를 통해 우발적 무력충돌의 선제적 방지 등 남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

남북대화 재개 시 인적·물적 교류협력의 추진방안과 로드맵

— 대화 복원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공동성장 —

조봉현(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공동대표,
전 IBK기업은행 부행장)

I. 서론

□ 남북관계 현황과 문제의식

- 오랜 정치·군사적 대립과 상호 불신 속 대화·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 약화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주요 경험사업 중단, 이산가족 상봉·체육·문화·학술 교류 미정상화
- 남북 연락채널·공식 대화 공백 장기화로 상호 오해와 불신 구조화

□ 접근 방향의 전환 필요성

- 과거 방식의 접근만으로는 관계 정상화 기대 어려움
-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국가관계'로 재규정, 대남기구·교류협력 조직 폐지 등 대남정책 근본 전환
- 과거 교류협력 모델의 단순 복원은 한계 → 평화공존·긴장완화·민생협력 우선의 현실적·단계적·국제연대 접근 필요

⇒ 남북이 신뢰를 되찾고 마주 앉아 대화를 복원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

※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

- 이재명 대통령, '평화 공존' 3대 비전 제시
 - 포용적 평화 공존
 - 안정적 평화 공존
 - 책임 있는 평화 공존
- 남북 간 대결과 적대 중단 및 대화·공동성장 추진 제안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남북 및 이해당사자 간 대화 촉구

□ 연구 목적 및 구성

- 북한의 상황 변화와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교류협력 접근이 필요
- 남북대화 재개를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통한 단계적 신뢰회복 및 평화경제·한반도 경제공동체 기반 발전 전략으로 모색
- 초기 인도적 협력·제한적 인적교류 → 민생협력·관광·경제협력 → 철도·도로·에너지·물류 등 인프라 협력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로드맵 제시

II.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과 교류협력 New패러다임

1.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

□ 현재 남북관계의 구조적 제약요인

- 북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 대남기구 해체·정비로 대화·교류의 제도적 기반 약화
- 고착화된 '적대적 2국가론', 군사적 긴장, 정치적 구조가 향후 남북관계의 주요 제약요인
- 남북대화 재개는 한국 정부 제안만으로 어려우며, 신뢰 회복, 북한의 정책 기조 변화와 국제·경제적 환경 조성 병행 필요

□ 북미관계라는 핵심 변수

- 북한은 대미 관계정상화·제재완화 우선시 → 북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외교적 공간 결정
- 북미대화 재개 시 남북관계 실용적 접근 여지, 북미갈등 심화 시 남북대화 장기 정체 가능성

□ 대화 재개의 구조적 필요성

-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경제발전을 위해 산업 현대화, 에너지 공급, 식량·보건 구축, 기술·설비 도입, 외화 확보 등 외부 자원·기술 활용 불가피
- 한국: 평화공존·경제적 상생 관점의 재접근 필요, 군사적 긴장완화 시 접경지역 성장기반 마련, 교통·물류망 연결 시 동북아 경제 거점 도약 가능
- 지정학적 위험 완화는 국가 신인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과 장기적 경제 공동체에 기여

□ 대화 재개 시점 및 조건

- 정치적 의지 문제라기보다 군사적 긴장완화, 북미 대화 환경, 북한의 교류협력 수요, 한국의 일관된 대북정책 등 조건 충족의 단계적 과정, 대화 채널 복원 등
- 단기간 전면적 대화 재개는 제한적이나, 남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조건 충족 시 2027년경 제한적·실무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준비 필요

□ 대화 재개 시 접근 방식

- 과거 모델의 단순 복원보다 북한의 현실적 눈높이에 맞게 관심사·대북제재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 필요
- 정치·군사적 현안과 분리, 보건·식량·환경 등 부담 낮은 분야에서 신뢰 축적 후 산업현대화·지방발전·물류 등 실질 수요 연계 협력으로 확대
- 일방적 지원을 넘어 북한의 기술·자원 수요와 한국의 자본·경제역량과 동북아 공동 성장을 결합하는 새로운 상생협력모델 모색

□ 대화재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디딤돌

- ‘작은 협력으로 시작해 신뢰를 쌓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모델’ 필요, 인도적 협력을 정치상황과 분리하고 대북정책을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로 관리
- 평화공존 실현 시 한반도는 7,500만 규모 단일 경제권이자 유라시아 진출 전략적 관문으로 도약 가능
- 남북 산업 시너지·대규모 인프라 확충·생산기반 확장 전제 시, 북한 연평균 6.3% 성장(2050년 1인당 GDP 3,000달러 돌파), 한국 연평균 4.7% 성장(1인당 GDP 약 12만 3,700달러) 추정

2. 남북교류협력의 New패러다임

□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 대남정책 변화·구조적 불신·대북제재 지속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양자 중심 대규모 협력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과 거두기 어려움

□ ‘상생의 교류협력’ 개념

- 남북 간 직접협력을 기본으로, 주변국(중·러)·국제기구·제3국 및 국제 민간기구를 연계하는 ‘다자간·단계적·실용적 협력’으로 전환
- 관계 개선을 넘어 한반도 평화·경제적 성장·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동시 추구하는 호혜적 모델
- 북한에는 기술·지식 및 국제시장 접근 기회, 한국에는 시장·공급망·물류·관광·자원 개발 협력 가능성 확대 → 경제적 격차·평화비용 축소 기반 마련 → 동북아 공동 성장

□ 제3국·다자 연대협력 공간의 활용

- 대북제재 및 각국 법·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는 틀 안에서 제3국·국제기구·NGO 등과 공동사업 발굴(보건·환경·재난·농업·교육 등 허용 분야부터)

□ 추진방식의 전환

- ‘대규모 사업 우선’에서 정치적 부담이 낮고 민생과 직결된 분야 위주의 ‘작은 성공 축적’으로 전환
- 초기 신뢰·경험 축적 후 여건 개선 시 산업·물류·인프라 등 경제협력으로 단계적 확대

□ 협력주체의 다변화

- 중앙정부(정책 틀·외교 기반), 지방정부(생활밀착형 협력), 기업·민간(사업 전문성), 대학·연구기관(지식 기반), 국제기구(사업 투명성)의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

□ 유연한 협력구조로의 진화

- 관계개선기에는 직접협력 확대, 경색기에는 국제기구·제3국을 통한 간접·인도적 협력 유지 → 교류 전면중단 리스크 완화

□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 ‘대규모·일회성’ → ‘소규모·지속가능’
- ‘양자협력’ → ‘다자·국제 연대협력’
- ‘시혜적 지원’ → ‘상호이익과 공동성장’
- ‘정부 주도’ → ‘민관·국제 다층 협력’

Ⅲ.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 갖는 교류협력 분야

1.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개발협력 인식 변화

□ 인식 변화의 개요

- 국가 주도적 계획경제 기본 틀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생산성 제고, 과학기술 발전, 기업 역할 확대, 자본·기술 활용을 증시하는 방향으로 변화

-
- 경제발전을 생산량 확대 문제가 아닌 과학기술·경영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성·산업 경쟁력 강화 과정으로 접근
 - 교류협력 인식도 단순 물자지원·자원보충 수단에서 기술·자본을 활용한 산업경쟁력 제고 수단으로 변화
 - 경제원리(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민간·비국가 부문 참여, 생산성, 기업, 산업발전 등 중시 경향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 전환은 아니며, 국가 주도 기조 유지하되 시장적 요소·기업 자율성·과학기술·자본기술 활용의 실용적 접근 확대

가. 국가 중심 개발에서 경제원리 중시로의 변화

- 과거: 국가 계획·지시에 따른 생산목표 설정·달성 중심, 국가 통제 절대적, 계획 달성 여부가 성과평가 기준
- 현재(김정은 시대): 경제적 계산·효율성·수익성·생산성 중시로 변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제적 성과 제고 인식 확대

나. 국가 단독 개발에서 비국가 부문의 역할 인정으로의 변화

- 과거: 국가가 경제활동의 유일한 주체, 민간의 독립적 경제활동·민간자본 역할 공식적으로 미인정
- 현재: 기업소 자율성 확대, 시장 기능 부분적 활용, 개인 경제활동·비국가 부문 역할 현실적 인정
 - 기업소 경영활동에서 자율적 판단 공간 확대, 생산·판매·자원조달에서 경제적 유인 활용 움직임

다. 생산 중심에서 생산성 중심으로의 변화

- 과거: 생산량 확대와 국가계획 달성이 핵심 목표

□ 현재: 동일 자원·노동력으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창출하는지의 생산성 문제 중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 인식

- 과학기술 발전·기술혁신, 경영관리 개선, 설비 현대화, 노동의 효율적 배분 병행 요구
-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핵심 동력으로 강조, 과학적 경영관리·현대적 생산체계 구축 지속 언급

라. 국가경제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의 변화

□ 과거: 기업이 국가계획을 수행하는 생산단위라는 성격이 강함

□ 현재: 기업을 생산성·경쟁력 제고 및 산업발전을 이끄는 핵심 경제주체로 인식 강화, 자율적 경영활동·경제적 책임 확대

- 경제협력 방식 변화 가능성: 국가 간 협정·정부 지원 중심에서 기업 간 기술협력·생산협력·합작사업·산업별 협력 등으로 다양화

마. 경제체제 유지에서 산업발전과 현대화를 중시하는 실용적 접근

□ 체제 유지·생존을 넘어 산업 자체의 발전과 현대화 강조

- 제조업·지방산업 발전, 공장·기업소 현대화, 과학기술 활용, 생산설비 개선을 통한 생산기반 강화 지속 추진
- 지방공업 발전·공장 현대화로 지역 생산능력 확대, 경제의 자립적 기반 강화 시도
- 경제개발구 조성 및 외부 기술·자본 활용에 대한 관심 증대 → 산업생산성·경쟁력 제고 지향

바. 종합 분석

□ 국가중심 계획경제 틀 유지 속 경제원리·효율성 중시, 기업·비국가 부문 역할 부분 인정, 기술·경영혁신을 통한 산업현대화를 추진하는 실용주의적 경제관 확대

-
- 핵심요소: 과학기술(Technology), 과학적 경영관리(Scientific Management), 자본투자(Capital Investment)

□ 시사점

- 남북대화 재개 시 시혜적 관점이 아닌 기술·자본·생산성·산업발전을 결합한 상호 이익형 협력모델로 접근 필요
- 북한 산업현대화·생산성 향상 지원과 동시에 남한 기업 참여·시장을 통한 경제성장과 창출 구조 마련

2.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 갖는 교류협력 분야

□ 개관

- 단순 물자지원·일회성 교류협력을 넘어 북한 경제의 구조적 한계 극복 및 산업화·현대화 추진을 위한 개발협력 성격
- 기업을 생산성 향상·경쟁력 확보 주체로 인식, 제조업 육성·공장 현대화·과학기술 발전·경제개발구 조성·외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구조 전환 지향
- 희망 분야: 보건의료, 농업·산림, 관광, 산업 현대화·정보화, 지하자원 개발, 에너지, 교통·물류, 첨단기술·R&D, 경제개발구 등
- 관광·자원·산업·물류·에너지·과학기술을 연계해 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을 동시 추진하려는 종합적 개발협력 구상 성격

가. 희망하는 교류협력 10대 분야

① 보건의료 및 병원 인프라 협력

- 배경: 노후화된 병원시설, 의료장비 부족, 의약품 공급난, 지역 간 의료격차

- 주민생활 직결, 군사 분야 관련성 낮아 국제기구 연계 다자협력 가능성 상대적으로 높음
- 협력수요: 종합·지방병원 현대화, 의료장비 도입, 필수약품 생산, 제약공장 현대화, 의료인력 교육, 병원 정보화,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
- 시사점: 감염병 방역·의료인력 교육·필수약품 등 인도적 협력 → 병원 건설·의료장비·의료정보시스템 개발협력 → 한반도 보건협력 체계로 발전(감염병 공동대응·방역정보 공유)

② 농업·식량 및 산림협력

- 배경: 북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면서도 정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 협력수요: 종자개량, 농기계 현대화, 비료 생산, 관개시설 개선, 저장·유통체계 구축
 - 첨단농업: 스마트팜, ICT 기반 농업관리, 자동화 관개시스템, 드론 활용, 시설농업
 - 세포축산단지 중심 축산시설·사료생산·가축개량·방역·축산가공산업 연계, 수산업·산림녹화까지 확대 구상
- 시사점: 종자·농업기술·산림복구 등 소규모 협력 → 스마트농업단지·농축산 복합단지·산림복원사업으로 확대

③ 관광개발 협력

- 배경: 관광산업을 제재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외화 확보 가능한 분야로 인식, 중·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수입 확대 의도, 국제관광 국가 이미지 구축 및 체제성과 과시
 - 원산·양덕·백두산 등 지방 거점의 관광도시 개발과 지방발전정책 결합
- 협력수요: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중심 호텔·리조트·도로·철도·공항 인프라 확충, 백두산·금강산·원산 연결 관광벨트 구축
 - 상품 다변화: 중국 백두산 관광객 연계, 원산·갈마 해양관광, 양덕·온천 휴양·웰니스, 마식령 스키관광, 평양 문화·역사·스포츠관광

- 시사점: 금강산 관광 재개 → 원산·금강산·백두산 연계 관광 → 중·러 연계 동북아 국제관광벨트로 확대

④ 산업 현대화와 정보화 협력

- 배경: 산업시설 노후화로 생산성·에너지효율 낮음, 노동력 부족 대응 및 제재 속 지속적 경제발전 위해 자동화·무인화·정보화 확대 필요
-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지방공업공장 신설·현대화,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자립적 생산능력 강화
- 협력수요: 생산공정 자동화, 스마트 설비, 기업관리 전산화, 데이터 기반 생산관리, 무인생산 로봇, 소프트웨어·ICT, AI, 나노기술, 생명공학
- 시사점: 농업·보건·환경·교육 등 부담 낮은 과학기술 교류 → 스마트제조·산업용 SW·ICT인프라·공장자동화로 확대, 지원 중심에서 공동개발·지역산업 육성 중심으로 전환

⑤ 경제개발구 및 복합개발 협력

- 배경: 경제개발구를 외자·기술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수출·외화수입 확대 수단으로 활용, 지역특성별 산업(농업·관광·수출가공·첨단기술·광물가공) 육성
- 협력수요: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중국 단둥 연계 금융·무역·산업 거점), 라선경제무역지대(중·러·동해 연결 국제물류 거점), 원산·금강산 관광지구(관광·서비스 복합개발),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첨단기술개발구
- 시사점: 개별 사업 산발적 추진보다 특정 지역을 선정해 교통·전력·통신·산업·관광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방식이 효과적
- 관광·물류·에너지·산업·농업·첨단기술을 공간적으로 결합한 복합형 개발협력 플랫폼

⑥ 첨단기술·R&D 및 지식경제 협력

- 배경: 과학기술·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과학기술 강국 건설 전략

- 협력수요: 평양·평성·은정 지역 중심 ICT·SW·AI·나노기술·생명공학 육성, R&D-생산-판매 연계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구상
 -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외국 첨단기술기업 유치, R&D 성과 산업화, 지식경제 시범 지역 육성 의도
 - 협력분야: ICT, SW, AI, 빅데이터, 전자산업, 나노소재, 생명공학, 농업 바이오기술
- 시사점: 국제제재·전략물자 통제 영향 고려, 기초과학·농업·환경·보건기술 공동연구·인력교류 등 비군사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산업협력으로 확대

⑦ 에너지 및 전력 인프라 협력

- 배경: 만성적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률·생산성 저하, 경제개발구·관광지 개발 위해서도 안정적 전력·가스·난방 공급체계 필요
 - 단순 전력 지원이 아닌 산업 현대화 기반을 구축하는 개발협력
- 협력수요: 노후 발전소 현대화, 송배전망 개선, 산업단지 전력공급체계 구축, 정유 공장 현대화, 석유화학산업 육성, 3,000만kW 규모 전력생산 기반 구축
 - 원유수입→정유·석유화학제품 생산 산업생태계 구축, 화학비료 생산 확대(농업생산성 연계), 풍력·태양광·조수력·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 시사점: 개별 발전소 사업보다 산업단지·경제개발구·관광지·농업지역 대상 종합 에너지 인프라 구축사업, 장기적으로 남북 전력망 연결·동북아 에너지협력으로 발전 가능

⑧ 지하자원 개발과 소재산업 협력

- 배경: 단순 광물 채굴·원료 수출이 아닌 중공업 재건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반사업, 경제발전 자금 확보
 - 보유자원: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흑연, 아연, 납, 동, 텅스텐 등
- 협력수요: 철광석 개발과 제철산업 현대화, 마그네사이트 개발, 희토류·흑연 개발 (배터리·첨단소재 연결 전략자원), 비철금속 개발

- 광산 개발에서 제철·기계공업·건설산업으로 이어지는 산업연계 증시
- 시사점: 광산 개발 단독 접근보다 철도·도로·항만·전력 등 인프라와 결합한 패키지형 개발협력, 채굴→가공→소재생산→수송 산업생태계 구축

⑨ 철도·도로 및 물류 인프라 협력

- 배경: 철도 노후화·전력 부족으로 수송 효율 저하, 현대화·도로 확충을 통한 물류비 절감·생산성 제고 시급, 경제개발구·관광지·광산 연계 위한 교통망 확충 필수
- 협력수요: 평양~북부지역(두만강·무산·만포) 철도망, 나선지대 연계 철도 현대화, 원산~함흥 고속도로, 원산~금강산 관광도로
 - 항만·공항: 남포·송림·단천·홍남·청진 항만 현대화, 나진항 국제물류허브화, 순안 공항 현대화, 원산갈마·삼지연 연계 국제공항 기능 강화(중국 동북3성·러시아 극동 연계)
- 시사점: 남북 간 물류망 연결을 넘어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다자간 물류 네트워크 구축으로 발전
 - 남북 철도 연결은 한반도-유라시아 물류망 구축 및 동북아 다자경제협력으로 확장하는 기반

⑩ 국제투자 및 외자 유치 금융 시스템

- 배경: 경제개발 자금 확보 및 장마당 세대의 기업 및 주민 경제활동 활성화, 국제금융시장 편입을 통한 북한식 경제 개방·현대화 촉진
- 협력수요: 국가개발은행, 외국인투자 금융체계, 국제보험·재보험, 무역금융 및 외환결제 시스템 구축
 - 국가개발은행 설립, 외국인 투자유치 기관 확대, 특구·관광·제조업 국제투자 유치, 무역은행·외환금융 기능 강화, 모바일·전자금융 등 디지털 금융 확대, 금융·투자 전문인력 양성
- 시사점: 대북제재·국제금융 접근 제한 고려, 단기적으로 금융·투자 제도 및 인력 연구·

- 교육협력 준비 → 중장기적으로 국제기구 연계 개발금융과 남북 공동투자 기반 구축
- 남북협력 연계: 한국의 정책금융·핀테크·투자보증·보험·산업단지 · 금융·기업 · 창업교육 역량과 연계
 - AIIB 등 다자개발금융기관과 연계한 다자간 개발금융 모델 검토 유효

구분	핵심 협력 수요	추진 방향 및 시사점
① 보건의료·병원 인프라	병원 현대화, 의료장비·의약품, 제약공장, 의료인력 교육, 병원 정보화·원격의료	인도적 협력(감염병·의약품) → 병원 현대화·의료정보시스템 →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체계
② 농업·식량·산림	종자개량, 농기계·비료, 관개·저장·유통, 스마트팜, 축산·수산, 산림복구	소규모 협력(종자·농업기술·산림복구) → 스마트농업·농축산 복합단지 → 산림복원사업
③ 관광개발	원산갈마·금강산·백두산 등 관광지 개발, 호텔·리조트·교통 인프라, 관광상품 다변화	금강산 관광 재개 → 원산·금강산·백두산 연계관광 → 동북아 국제관광벨트
④ 산업 현대화·정보화	공장 현대화·자동화, 스마트 생산설비, 기업관리 전산화, 로봇·ICT·AI, 지방공업 육성	과학기술 교류 → 스마트제조·ICT·산업용SW → 20×10 정책 연계 지역 산업 공동개발
⑤ 경제개발구·복합개발	신의주·라선·원산·금강산 등 특구 개발, 외자·기술 유치, 산업·관광·물류 결합	특정 지역 선정, 교통·전력·통신·산업·관광 패키지형 복합개발 모델
⑥ 첨단기술·R&D·지식경제	ICT, SW, AI, 빅데이터, 나노·바이오, 전자산업, 연구개발 및 산업화	기초과학·농업·환경·보건기술 공동연구 → ICT·AI·첨단산업 협력 → 지식경제 협력
⑦ 에너지·전력 인프라	발전소 현대화, 송배전망 개선, 산업단지 전력, 정유·석유화학, 재생에너지	산업단지·경제개발구·관광지 대상 종합 에너지인프라 구축 → 동북아 에너지 협력
⑧ 지하자원·소재산업	철광석·마그네사이트·희토류·흑연·비철금속 개발, 제철·소재산업 현대화	자원개발 탈피, 광산→가공→소재생산→수송 산업생태계, 인프라 결합 패키지형 개발
⑨ 철도·도로·물류	철도 현대화, 도로 확충, 경제개발구·관광지·광산 연결, 항만(남포·청진·나진)·공항 현대화	남북 철도·도로 연결 → 동북아 물류망 → 유라시아 물류체계·다자간 물류 네트워크
⑩ 국제투자·외자유치 금융	국가개발은행, 외국인투자 금융체계, 무역금융·외환결제, 보험·재보험, 디지털금융, 인력 양성	금융·인력 연구교육 → 제재완화 이후 개발·투자금융·보험 협력 → 개발금융 플랫폼 구축

나.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 갖는 교류협력의 특징

□ 성격

- 과거의 단순 물자지원·노동력 활용형 협력과 성격이 다름
- 자본·기술·인프라·시장·경영관리 능력을 결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현대화하는 개발협력
- 경제원리·생산성, 기업 역할 확대, 산업 현대화, 과학기술, 외자 유치 강조 → 협력 수요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동

□ 협력수요의 시기

- 단기: 외화·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관광·농업·보건의료 협력
- 중기: 산업생산성·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에너지·교통·자원·산업 현대화 협력
- 장기: 경제구조 자체 전환을 위한 첨단기술·R&D·경제개발구·국제물류 및 산업클러스터 협력

□ 향후 방향

- 일방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기술·자본·경영역량을 결합하는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 체계로 전환 필요
 - ‘지원받는 북한’에서 ‘투자·기술·시장과 연결된 개발 파트너로서의 북한’으로 전환
- 중·러 등 주변국과의 연계성이 강한 점을 고려, 남북 양자 교류협력에 한정하기보다 중·러 및 일본과 국제기구 참여 다자간 교류협력모델 병행 필요
- 저Risk 분야(관광·농업·보건의료)에서 신뢰 축적 → 에너지·교통·산업·자원개발로 확대 → 장기적으로 첨단기술·경제개발구 중심 동북아 다자간 개발협력으로 발전

Ⅳ. 남북 인적·물적 교류협력 추진 방안: 단계별·다자간 접근

1.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 대화 재개 시에도 불신·군사적 긴장·대북제재로 대규모 경협을 단기 추진은 어려움 → 부담이 적은 신뢰구축 분야에서 시작해 민생·경제로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 요구
- ‘대화·신뢰 형성 → 인도적·민생협력 → 다자간 실용협력 → 산업·인프라 협력 →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이어지는 구조 형성
- 과거 양자협력에서 벗어나 중·러,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방식 적극 활용 → 정치·경제적 부담 경감, 제재관리 용이, 동북아 물류·에너지·관광 네트워크와 연계한 협력공간 확장

2. 단계별 추진방안

- 1단계: 대화 여건 조성 및 다자적 신뢰 형성
- 2단계: 민생·비제재 분야 실질협력 확대
- 3단계: 대규모 인프라 및 평화경제 공동체 구축
- * 각 단계는 여건 변화에 맞추어 점진적·연계적으로 확대 추진

가. 1단계: 대화 여건 조성 및 소규모·인도적 다자협력 및 신뢰 형성

□ 기본방향

- 남북 간 단절된 대화채널 복원과 동시에 중·러 등 주변국·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 기반 조성
- 대규모 경협·정치적 민감사업보다 인도적 협력, 민간·전문가 교류 등 부담이 적은 분야부터 시작

-
- 점차적으로 첨단기술·R&D 공동 프로젝트 확대, 경제개발구 다자 공동투자 활성화, 핵심 인프라 연결

□ 인적 교류

- 이산가족 등 인도적 현안 우선 추진(양자 방식과 다자적 접근 병행)
- 중국 및 러시아 거주 한인·탈북민 문제, 보건·감염병, 기후변화·산림·재난관리 등에서 중·러 및 국제기구 참여 공동사업 추진(제3국 매개 교류공간 확보 대안)
- 민간·학술·체육·문화 교류: 제3국 국제행사·공동 프로그램 활용, 중·러 등에서 남북 전문가 공동 참여 학술회의·체육문화행사
- 공식 대화가 어려울 경우 국제기구·제3국 지원 하 비공식 실무접촉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검토

□ 물적 교류

- 의약품·비료·종자·묘목 등 인도적 물자 중심으로 국제기구·주변국 참여 협력체계 구축
- 식량·보건·산림·재난대응 등은 제재면제·물자 반출입 절차 사전 확보(국제기구·관련국 협의)

□ 경제 분야

- 지식공유사업(KSP), 경제개발구 인력교육, 산업·금융·무역 전문인력 양성 추진
- 한국·중국·러시아·일본의 개발경험·전문가 참여 다자간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초기 부담 적고 향후 경제개발 기반 마련에 유용)

□ 접경지역 초국경 협력

- DMZ 개발협력 본격 착수(평화경제특구, 철도 연결 등)
- 두만강 유역 환경보전·산림복원·재해예방 등 관련국 참여 다자협력으로 실현가능성·지속성 제고

□ 국내 제도 정비

- 독자 대북제재 중 교류를 제약하는 조치의 실효성 검토 및 단계적 완화방안 마련
- 유엔 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 체계와 조화, 다자간 협력 틀을 통한 제재관리·사업 투명성 확보

나. 2단계: 민생·비제재 분야 중심의 다자간 실질 교류 확대

□ 기본방향

- 1단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의 규모·범위 확대, 중·러 등 참여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
- 북한의 민생개선·경제적 필요 충족 + 한국의 기술·경험, 중·러의 생산·물류·시장 기반 결합

□ 인적 교류

- 관광 다자간 확대: 금강산·원산갈마·백두산·삼지연 등 주요 관광지역을 중·러 관광 네트워크와 연계
- 백두산·두만강 유역 등 초국경 관광자원 활용, 남북+중·러 기관·기업 참여 동북아 관광협력 네트워크 구축
- 농업: 세포지구 등 농축산 복합단지·스마트팜 대상 한국 기술+중국 생산유통 경험 +러시아 농업자원·물류 기반 결합 다자협력모델 구축
- IT·SW: 비정치적·비군사적 영역 중심 청년·연구자 간 공동연구·인력교류 추진 (AI, 디지털전환, 기후·환경 데이터, 재난관리 등)

□ 물적 교류

-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등 기존사업 재개 검토(중·러 기업·국제기구 참여 새로운 운영모델)

- 개성·신의주·라선 등 주요 경제거점을 남북, 북중, 북러 협력과 연계 개발
- 농업: 스마트팜 설비, 농기계, 양묘장 현대화 자재 단계적 공급
- 보건의료: 지방병원 시설 개선·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비·기자재 공동 지원(국제기구 사업관리·모니터링 참여)
- 소규모 위탁가공·제3국 경유 교역 등 제재 범주 외 교역방식 활용, 생필품·소비재 단순 품목에서 시작해 규모 확대 → 북한을 동북아 생산·물류 네트워크에 단계적 편입

다. 3단계: 대규모 인프라 및 평화경제 공동체 구축

□ 기본방향

- 신뢰회복·대북제재완화 전제, 개별 사업을 넘어 중·러 등 참여 광역 경제협력체계 구축, 한반도-동북아 경제 연결성 강화

□ 인적 교류

- 신의주·은정·라선 등 경제개발구 중심 남북+중·러 경제·산업·금융·기술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 라선·신의주 등 주요 거점을 중·러 물류망+한국 자본·기술·시장과 결합, 동북아 생산·물류·관광 네트워크 핵심거점 육성

□ 물적 교류

-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경의선·동해선을 TCR·TSR과 연결, 동북아 물류 핵심 통로로 발전)
- 나진항·원산 등 물류·관광 인프라 현대화·공동개발, 라선 중심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각국 기업 공동참여)
- 에너지: 노후 발전소 개보수, 송배전망 현대화, 에너지·비료 생산시설 재건(러시아 에너지·기술+중국 발전·송배전+한국 에너지효율화·신재생에너지 결합)

- 지하자원: 무산 철광석, 단천 마그네사이트 등 공동 개발·가공 추진(북한 자원+한국 기술·자본·가공+중·러 개발·시장·물류), 제재 개선 시 희토류 등으로 확대(투명한 개발원칙·국제기준 필요)

V. 실행을 위한 로드맵

1. 로드맵 설계 방향

- 남북관계뿐 아니라 중·러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대북제재 환경을 종합 고려
- 양자관계만 전제로 한 대규모 사업보다,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제3국·국제기구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다자적 접근이 현실적
 - ‘선제적 신뢰구축 → 남북대화 재개 → 소규모 실질협력 → 다자협력 확대 → 대규모 경제·인프라 협력’의 단계적·조건부 접근으로 설계
- 한반도-동북아를 하나의 경제·물류·인적교류권으로 연결, 경제적 상호의존성 제고
 - 철도·도로·항만·에너지·관광·환경 등은 중·러와 연계할 때 경제성·지속가능성 제고
- ‘남북 간 신뢰 구축’ → ‘남북+주변국 협력’ → ‘동북아 다자협력’으로 확대되는 단계적 구조로 설계
 - 중·러의 이해관계를 활용, 미·일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 병행하여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제사회 지지 확보
- 단계별 실행 틀
 - 기반 조성기, 대화 물꼬기, 교류 점화기, 본격 추진기(기존 4단계 틀 유지, 각 단계에서 주변국 연계와 국제사회 참여를 점진 확대)
- 각 단계 전환은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호응, 북미관계·국제정세, 중·러의 참여 가능성, 대북제재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판단하는 탄력적 구조로 운영
- 정부는 대화 재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준비된 교류협력사업’ 목록을 사전 구축(타당성, 재원조달, 제재 면제, 협상안, 제3국 참여 및 국제기구·민간 협력방안 등)

2. 기반 조성기(26.下~'27.上) — 선제적 신뢰 구축과 다자협력 기반 마련

□ 목표

-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한 국내외 정책·제도적 기반 정비, 대북 선제 신뢰구축 신호, 중·러 등 주변국과의 협력기반 마련
- 특정 양자관계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 병행

□ 추진 내용

- 주요 국가행사·정책계기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 공식화, 중·러에 긴장완화·교류확대의 동북아 이익을 설명하고 다자협력 참여를 위한 외교기반 조성
- 교류를 제약하는 국내 독자 대북제재의 실효성 검토, 5·24 조치 등 조정 필요 부분은 단계적 완화·해제 검토(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 제재 체계와 조화, 미·중·러 정책공조 범위 내 추진)
- 접경지역 상호 자극 행위 축소, 대북방송 등 탄력적 조정 검토(적대행위 축소 및 대화환경 조성을 위한 선제적 신호)
- 공식 대화 재개 전 민간·학술·체육 분야 및 제3국을 활용한 비공식 접촉 채널 복원(중·러 등에서 개최되는 학술·문화·체육 교류 확대)

3. 대화 물꼬기(27.下~28) — 남북대화 재개와 다자간 협력채널 구축

□ 목표

- 남북 간 공식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실질적 신뢰 회복 추진, 동시에 중·러 등 주변국과의 협력채널 제도화

□ 추진 내용

-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한 남북관계 전환 공식 선언, 정치·군사 현안보다 인도적·민

생 분야 실질 협력 우선 시작, 중·러와도 보건·환경·재난·농업·문화 등 부담 적은 분야 공동협력 모색

- 남북대화와 병행해 한·중·러 정책협의 채널 가동 검토(초기 비공식 협의체, 전문가 회의, 경제·물류 포럼 형태로 운영)
- 북한 대남 조직·인물이 대거 교체되었을 가능성을 고려, 사전 분석을 바탕으로 회담에 임할 필요
-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병행: 한미연합훈련 방식·규모 조정 검토(한미 간 긴밀한 협의 기반, 주변국과의 소통 병행)
- 인도적 협력: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우선 의제로 제시, 보건·산림·농업·재난대응 등 주민생활 관련 교류 공식 제안, 국제기구·중·러 연계 인도적 협력사업으로 양자 협력의 한계 보완

4. 교류 점화기(2029~) — 소규모 실질협력과 다자협력사업 착수

□ 목표

- 공식 대화가 일정 수준 정착되고 상호 신뢰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실질적 교류협력 사업 착수
- 대규모·정치적 민감사업보다 북한의 경제적 수요가 높고 주민생활 개선 효과가 큰 분야 우선 선정

□ 추진 내용

- 남북 양자사업과 함께 중·러가 참여하는 다자간 시범협력사업 적극 추진(접경지역 환경·산림, 감염병·보건의료, 농업기술·스마트팜, 관광·문화교류)
-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 조성, 중국 동북지역·러시아 극동지역과 연계, 장기적으로 남북+중·러 접경지 교통·물류·관광 협력벨트 구축(동북아 경제협력사업으로 확대)

- 협력사업: 백두산·삼지연, 원산갈마 등 관광 분야와 보건의료, 스마트팜, 산림·환경(중·러 관광객·기업 참여로 경제적 효과·지속가능성 제고)
- 국제외교: 미국·유엔 등과 협의해 제재 면제·예외 인정 추진, 중·러 등 주요국과 제재체계 내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투명한 사업관리 체계 마련

5. 본격 추진기(2030~) — 다자간 경제협력과 동북아 인프라 연결

□ 목표

- 신뢰 축적·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대규모 경제협력과 인프라 개발 본격화, 동북아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로 발전

□ 추진 내용

- 관광: 금강산·원산갈마 등 주요 사업 재개, 중·러 관광네트워크와 연계
- 산업협력: 개성공단을 스마트 제조·첨단산업·국제분업체계를 접목한 ‘개성공단 2.0’으로 발전, 장기적으로 중·러 기업 참여 가능성 검토
- 교통인프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현대화를 중·러 철도·물류망과 연계,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네트워크 핵심거점으로 육성, 유라시아 교통망과 연계
- 에너지: 발전소·송배전망 현대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중·러 연계 전력·가스 협력 검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화·산림환경 등 부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 확대)
- 자원개발: 중·러 기술·자본+북한 자원·노동력+한국 기술·관리 역량 결합 다자모델, 단천 마그네사이트·무산 철광석 등 제재 허용범위 내 투명성·국제규범 준수하며 추진
- 첨단산업: AI·ICT·바이오나노·기후환경기술 등 비군사적 영역 공동 R&D 확대, 남북+중·러 연구기관·기업 참여 다자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VI. 결론

□ 남북교류협력의 재정립

- 남북대화 재개를 남북한 교류협력과 한반도 평화경제 전환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
- 단순한 대북지원이나 통일정책 수단을 넘어 공급망·에너지·물류·관광·식량·환경·접경지역·미래산업을 연결하는 국가경제 성장전략
-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평화공존 기반을 넓히는 평화전략

□ 접근의 기본 방향

- 새로운 출발점은 단번의 거대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작은 접촉과 교류의 지속적 축적을 통한 신뢰 회복
- 첫 목표는 대규모 경협이나 통일 추진이 아닌 대화·연락 복원과 군사적 긴장 완화
- ‘대화 → 평화 → 교류 → 경제 →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함

□ 단계적 확장 구조

- 이산가족·보건의료 등 인도적 협력 → 농업·산림·식수 등 민생협력 → 체육·문화·학술·청년교류를 통한 사람 간 연결 복원
- 관광, 스마트농업, IT·SW, 산업현대화 등 경제협력으로 확대,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발전적 재개와 금강산·원산 관광협력 검토
- 철도·도로·항만·에너지·물류·통신 등 인프라 연결을 통한 남북 간 경제적 연결망 구축
- 확장구조: ‘대화 → 인도 → 민생 → 사람 → 경제 → 인프라’

□ 지향해야 할 전환

- 지원 중심 → 호혜적 협력
- 단절 → 연결
- 임가공 및 노동 집약적 중심 → 첨단산업·공동 R&D 병행
- 일회성 → 지속 가능한 공동사업
- 정부 중심 → 민관 협력
- 양자협력 → 국제기구·동북아 국가 참여 다자협력

□ 향후 과제

- 대화 재개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즉시 실행 가능하도록 사업 발굴, 제재·국제법 검토, 국제기구 협력체계 구축, 중앙·지방정부·기업·민간·학계의 역량 결집을 지금부터 추진
-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접근 및 종합 플랜 수립과 단계적 실행
- 북한의 호응을 위한 지속적인 대화 모색 ; 남북 대화채널 복원과 다자간 연대 등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한일평화포럼 공동 세미나
한반도 평화공존과 한일협력 방안 모색

2세션

한일관계: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

동북아 질서재편기 한·일 안보협력의 쟁점과 향후 과제

조성렬(경남대 초빙교수, 전 주오사카 총영사)



미국의 지역통합전략과 전후 동아시아 질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과 '차축-바퀴살' 안보체계

- ❖ **동아시아지역의 집단방위체제 (collective defence system) 시도와 무산**
 - 1949. 3. 20 키리노 필리핀 대통령이 NATO결성(1949. 3. 18)에 발맞춰 **태평양동맹(Pacific Pact)** 결성을 제안해 이승만 대통령-장제스 총통이 지지했으나 일본 배제, 국력격차 등 이유로 미국 반대
- ❖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차축-바퀴살(Hub & Spokes)' 안보체계** by Dean Atchison
 - 국가 간의 현격한 국력격차,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으로 지역통합전략 부진
 - 일본 중심으로 아시아 반공국가들 하나로 묶는 지역통합전략 추구 *cf)* 애치슨 라인
 - 한국전쟁 발발 이후 양자동맹 체결: **미-필리핀**, **미-일**, **한-미**, **미-대만** 상호방위조약
1951.8 1951.9 1953.10 1954-71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과 한일 65년 체제의 성립

- ❖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과 한일 국교정상화** *북대서양조약기구(1949),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2)
 - 미국이 일본을 공업화한 뒤에 공업화된 일본의 경제원조를 통해 한국 근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한일 두 나라가 극동지역의 강력한 방공보루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
 - 이 전략은 194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다가 미국이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1958년부터 본격 추진
 -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1960년 **미-일 안보조약**과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체결로 기본틀 완성
- ❖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부진**
 -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경제협력은 활발해졌으나, 한일 과거사문제와 일본의 일국명화주의로 안보협력은 부진
 - 이 전략에 따라, 한국정부의 베트남 파병(1964~73) 및 오키나와의 일본 귀속(1972.5)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가 잔류



2

중국의 굴기와 국제질서 재편 구상

* American Dream vs. 中國夢

제18차 당대회(2012.11): 두번째 백년의 목표(两个百年目标)와 인류문명공동체 건설

- 2035년까지 미국 중심의 일국체제가 아닌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제시 *ex)* 시진핑의 '신형대국관계론'(2012.2/2013.6)
-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偉大復興)'이라는 중국의 꿈' 달성

2021년	(2027년)	2035년	2049년
창당 100주년	창건 100주년	(중간목표)	건국 100주년
전면 소강사회 건설	사회주의 현대화 노정 시작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 새로운 역내 강대국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구상

- ❖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제안**
 - 2013. 9. 카자흐스탄 대학 강연에서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 제안
 - 2013. 10.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제안
 - 2017. 10. 제1회 BRI 정상회의에서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 제안
통신인프라, AI, 클라우드컴퓨팅, 위성네트워크, 전자상거래
- ❖ **일대일로 35개년 사업(2014~2049)**
 - 5대 이념: 정책소통, 인프라연결, 무역확대, 자금조달, 민심상통
 - 자금: 위안화 국제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BRICS개발은행



중국의 굴기와 동아시아 질서재편 전략

도련(島鏈, Islands Chain) 전략

1982년 해군총사령관 겸 당 군사위 부주석 류화칭(劉華清)의 해군해양계획 청사진:

- (1) 2010년까지 제1도련 내 제해권 확립 내해화
- (2) 2020년까지 제2도련 내 제해권 확보
- (3) 2040년까지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권에 대한 억제력 확보

到二〇一〇年為止, 確立第一島鏈的防禦體系, 使國力增長; 到二〇二〇年實現第二島鏈的防禦體系, 到二〇四〇年海上力量能與美國在太平洋、印度洋地區的力量相抗衡

중국에외주의적 해양법 주장

- EEZ설정: 중간선이론 아닌 **항행** 이론 적용 → 이어도, 가거초 문제
- EEZ권한: 군함, 관공선의 **무해** 통항권 불인정 → 항행의 자유 문제
- ※ **대만해협**: 국제해협 불인정 → 대만해협 통행 문제



- 2015년 동풍DF-26 배치에 따라 2020년 광 앤더슨공군기지의 전략자산 철수 및 미 본토로 이전배치
- 시진핑 정권 등장 이후 구단선(집단선 확대) 영해화 추진: 2014 중·일 충돌 → 2013 필리핀, 상설중재재판소 제소 → 필리핀 승소(2016)

중국의 굴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전략

'요시다 노선'에서 '아베 노선'으로

- ❖ 경무장(호헌)·경제우선 → 전쟁할 수 있는 나라: 한반도정착이나 안보법제 통한 집단자위권재무장
- ❖ 아시아태평양 외교 →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이슈에 관여
- ❖ 일국 평화주의 → 적극적 평화주의: 전수방위 원칙을 버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중국의 도련전략, 일대일로 구상과 일본의 인태전략

❖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2006.11.30 아소 외상)

- 아베 1기 내각: 중국의 굴기, 러시아의 부활을 견제해 '자유와 번영의 호(弧)' 구상 제기
- 기본구상: 북유럽에서 동유럽, 중앙아, 동남아에 이르는 유라시아외곽띠를 따라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 보편적 공유가치들과의 연대 강화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전략(2012.12, 2016.8 아베 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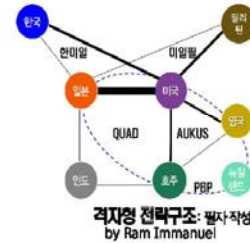
- 아베 2기 내각: '아시아 민주주의의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2012. 12)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2016. 8)
- 기본구상: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미일동맹, △영국·호주와의 준동맹, △동남아시아태평양 도서국가와의 우호협력 강화로 중국의 팽창(일대일로) 억제



중국의 굴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억제전략과 소다자안보기구 구상

- ❖ 통합억제전략(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국방전략서 NDS, 2022.10):
 -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국의 모든 국가역량과 동맹네트워크를 유지적으로 결합해 적의 위협을 막아내는 전략
- ❖ 소다자안보기구의 창설
 - 마·일·호·인 4국 안보대화 **QUAD** (2021.3.12)
 - 마·영·호·인자력잠수함 동맹 **AUKUS** (2021.9.15)
 - 한·마·일 3국 안보협의체 (2023.8.18)
 - 마·일·필 3국 안보협의체 (2024.4.11)
 - 푸른 태평양연대 (Partners in the Blue Pacific, 2022.6)



트럼프 행정부의 '유연한 현실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

- ❖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 국방전략서 NDS, 2026.1):
 - 기존 '통합억제' 중심의 다자개입에서 벗어나 '미 본토방어와 핵심국익' 중심의 명확한 우선순위 재조정 강조
- ❖ 미 국방전략의 4대 축: 본토방어, 중국억제, 동맹 부담분담, 방산 강화
 - 중국과의 '적절한 평화(decent peace)': 대만에 대한 무조건 군사개입 약속 회피(전략적 모호성)
 - 조건부 동맹(conditional alliance): 한국, 일본의 대규모 대미투자 및 국방비 대폭 증액
- ❖ 마·일 주도의 소다자안보기구보다 미국과의 양자 안보관계 선호
 - 양자관계를 통해 안보 제공의 댓가로 대미 투자 및 경제협력 압박 ex) 트럼프2기 행정부에서 소다자협의체 정상회담 미개최

동북아 질서재편 움직임과 일본의 안보 법제화



1단계: 아베 내각의 '안보문서' 제정(2013년)

- 최초의 국가안전보장전략 수립,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필요성 제기



2단계: 아베 내각의 '평화안전법제' 재·개정 (2015년)

-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할 사태법(존립위기사태 등) 법제화 완성



3단계: 기시다 내각의 '안보 문서' 1차 개정 (2022년)

- 러·우 전쟁 등 신안보 환경 대응 및 '적기지 반격 능력' 명문화



최근: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 문서' 2차 개정 및 '평화안전법제' 재정비 (2026년)

- 비핵 3원칙 수정 검토, 원잠 도입 논의 등 초강경 안보전략 수립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태법들의 공세적 전향 조치 가속화

마일 방위협력 및 마일안보조약의 범위 확대

마일 방위협력지침과 안보법제 정비

- ❖ **마일 안보협력지침 제정(1차, 1978. 11):** 「마일 안보조약」의 군사협력을 구체화한 행동지침
- ❖ **마일 안보협력지침 개정(2차, 1997. 9) 및 주변사태법 제정(1999. 11) *자위대법 개정**
 - 주변사태법은 마일 군사협력의 범위를 주변사태(극동-한반도, 대만) 때 미군의 후방지원 규정
- ❖ **마일 안보협력지침 개정(3차, 2015. 4) 및 평화안보법제 제정·정비(2015. 9제정 → 2016. 3발효)**
 - △ 지리적제약철폐 및 글로벌 협력 확대, △ 집단적 자위권 반영(존립위기사태 대응), △ 평화화색지대사태, 유사시까지지 아음매 없는(Seamless) 협력체계 위해 **동맹조정메카니즘(ACM)** 신설, △ 새로운 안보영역(우주감시, 사이버안보, 탄도미사일 방어)으로 협력 확장, △ 한반도 등 제3국 영역에서의 작전 지원 수행시 해당국 주권을 완전히 존중



마일 안보조약과 '센카쿠열도' 적용

- ❖ **「마일 안보조약」 제5조:** “일본영토에 무력공격이 있을 때 마일 양국은 공통의 위험에 대처”
 - 2014. 4. 24. 오바마-이베 정상회담: 마일안보조약 5조의 센카쿠 열도 적용에 구두 합의
 - 2023. 1. 11. 외교국방2+2회담: 마일안보조약의 적용 범위를 기존 일본 **육해공, 사이버 공간**에서 **우주로** 확대하고, **일본 안공위성**이 타국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양국이 무력을 이용해 대항기로 합의
 - 2024. 4. 10. 마일 정상회담: 마일안보조약이 중 일 분쟁지역인 ‘**센카쿠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
 - 2025. 1. 31. 마일 국방장관회담: **안타지역협력, 양국자위통제체제 향상, 난세이제도 마일 공동주둔 확대, 센카쿠열도의 안보조약 적용**
 - 2025. 2. 7. 마일 정상회담: 마일안보조약의 센카쿠 열도 적용

다카이치 정권의 3대 안보문서 개정 추진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의 위협인식 변화 [● 2013.12 → ● 2022.12]

- ❖ **중국:** “● 급속한 군비확장과 투명성 결여, 국제사회의 우려” → “●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강화, 최대의 전략적 도전**”
- ❖ **북한:** “● 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질적으로 심화” → “● **중전보다 한층 증대하고 긴박한 위협**”
- ❖ **러시아:** “모든 분야에서 협력” → “●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와 맞물려 방위상의 강한 우려**”(NSS)

3대 안보문서의 개정 방향

- ❖ **국가안전보장전략(NSS)**
 - ‘비핵3원칙’의 재검토 및 수정 추진, 종합국력(군사력·기술력)과 경제안보의 결합, ‘동지국’(한국, 호주 등)과의 연계 구체화
- ❖ **국가방위전략(NDD):** 현대 기술전(AI·사이버·무인기) 대응태세 명시, 원자력잠수함(SSN)의 도입 추진 검토
- ❖ **방위력정비계획(DBP):** 방위비 증액목표 상향 및 가속화, 군수방위산업 인프라 강화 및 국유화, 방위장비 무상공여 폐지화

3대 안보문서의 핵심 쟁점

- ❖ **방위비 대폭 증액 및 목표상향:** 기시다 정권이 설정한 ‘GDP2%’목표를 넘어 최고 3%수준(연간 약 20조엔 규모)으로 증액 검토
- ❖ **‘비핵3원칙’ 수정 및 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
 - 비핵3원칙(보유·제조·반입 금지) 중 ‘반입금지’규정의 수정 논의,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요구한 원자력잠수함 조기 도입 논의
- ❖ **방위산업 강화 및 무기수출 규제 완화**
 -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추가완화를 통한 무기수출 확대, 주요 군수공장 국유화 등 안보공급망의 자급체계 구축
- ❖ **첨단 현대전(AI·사이버·무인기) 대응력 명문화:** 변화된 전쟁 양상에 따른 새로운 안보 과제의 대응태세 확립

다카이치 정권의 평화안전법제 재정비 방향



❖ 안보법제 재정 정비(2015.9제정→2016.3발효)

- ① **중요영향사태법** :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지리적 제약을 철폐하고 미군 이외의 타국군도 지원 대상에 추가
- ② **존립위기사태법** : 주일미군기지, 광, 대만이 공격받을 때 '최소한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 ③ **무력공격사태법** : 센카쿠열도 등 일본영토에 대한 공격의 실행 및 조짐에 대해 반격할 수 있도록 한 '적기지 반격론'의 근거
- ④ **국제평화지원법** :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타국 군대의 후방지원이 가능

❖ 다카이치 정권의 재정비 방향 안보3문서의 조기재개정을 통해 '존립위기사태', '중요영향사태'의 적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 ① **중요영향사태법** : 자위법위장소제약을 사실상 철폐 및 마일 일체화, 대만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즉각 발동
- ② **존립위기사태법** : "대만유사시 존립위기" ...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高杉, 2025. 11. 7)
 - '대만 봉쇄/유사시를 존립위기사태로 명시적 포섭으로 적용요건의 명확화 확대, 반격능력(스탠드오프 미사일)을 미군과 공동행사할 수 있도록 운용 법제화 추진
- ③ **무력공격사태법** :
 - 반격능력(적기지 공격)의 법적·실전적 운용 체계화로 전수방위 원칙의 실질적 해체, 개헌을 통한 자위대의 정규군화 및 헌법 명기 추진
- ④ **국제평화지원법** : 미일동맹을 넘어 다자간 안보협력(호주, 나토 등) 후방지원 확대. 단, 호르무즈 등 위험지역은 헌법 제9조 명분으로 회피 활용



다카이치 정권의 무기수출금지 철폐와 방산 육성정책

다카이치 정부의 무기수출 정책 쟁점

※ 아베 내각(2014): '무기수출 3원칙' 폐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제정 (① 본방당사국 유엔결의 위반국 이전금지, ② 평화공헌 일본안보기여 허용, ③ 목적의사용제(3국이전 허용))

❖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내의 '5가지 용도 제한(5유형)' 철폐와 살상무기 수출 전면화

- 기존 지침에서 허용한 비상상 목적 '5가지 유형'(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제한의 공식 철폐
- 일본과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등 17개국에 한해 살상무기 완제품 수출을 완전히 허용

❖ 정부의 독자적 재량권 강화 및 국회 패싱 우려

- 기존에는 무기수출 결정 때 엄격한 국회 심의나 통제적 장치들이 제기
-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무기수출을 확정된 뒤 국회에는 사후 통지만 하면 되는 구조로 설계

❖ 국제분쟁국 우회수출 쟁점

- 개정안에는 '무력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직접 수출은 명목상 금지하고 있으나, 우방국(예: 미국)으로 수출된 일본산 무기, 탄약이 제3국(예: 전쟁중인 분쟁국)으로 우회 이전되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워 '전쟁조장국'이 될 위험성 내포

다카이치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정책

전수방위기반의 내수조달→'국가전략차원의 글로벌방산공급망 진입 및 수출산업화'

❖ 수출규제 대폭 완화 및 기업 수익성 보장

-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정부-정부 계약 전담조직(미국 FMS형태), 방산참여기업의 납품마진 보장, R&D·설비투자 보조금 대폭 증액

❖ 국제공동 개발·생산 확대

-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GCAP 개발사업 주도, 미국과의 미사일 공동개발(SM-3 등) 및 탄약부품 라이선스 생산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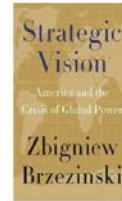
❖ 이중용도(Dual-use) 및 첨단기술 투자

- 일본의 강점인 소재, 반도체, 정밀기계 등 민간기술을 드론, AI, 저궤도위성망, 스탠드오프미사일 등 미래 비대칭 전력에 적용(Spin-on)

브레진스키의 지정학적 위험국가와 한국의 선택

• 브레진스키(Z. Brzezinski), <전략적 비전: 미국과 글로벌파워의 위기> (2012)

미국의 글로벌 지위 하락에 대비하여 주변 강국에 의해 지정학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8개국: 조지아, 대만, 대한민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국가



- ❖ 지정학적 위험 국가: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안보를 의존하거나 지역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정학적 추축에 위치해 미국의 쇠퇴 때 양자택일이나 핵개발 압박에 직면할 국가
 - 전쟁을 경험한 국가: **아프가니스탄** (소 1979~89, 미 2001~21), **조지아** (2008), **우크라이나** (2014~)
 - 이미 양자택일을 한 국가: **벨라루스** (2000. 1. 러-벨 연합 *Union State*, 2023. 6. 러 핵무기 배치)
 - 자체 핵무장을 한 국가: **파키스탄** (1998. 5), **이스라엘** (1966~67년) + **이란** (핵개발 시도)
 - 전쟁 위험성이 남은 국가: **대만, 한국**

❖ 한국의 지정학 리스크 평가(Brzezinski) 및 한국정부의 선택지

- 미국의 쇠퇴로 한국은 **고통스러운 양자택일**의 선택에 직면
 - **중국**: 지역 지배력 (regional dominance)을 수용하고 동아시아 안보 보장자(guarantor of security) 역할에 더 의존
 - **일본**: 역사적으로 인기가 없지만 민주적 가치와 북-중 위협을 공유한 일본과의 보다 강력한 관계를 모색
 - 강력한 미국의 지원없이 일본이 중국과 맞서는 데는 많은 문제 (problematical at best)가 존재

한국·일본의 대미 파트너 신뢰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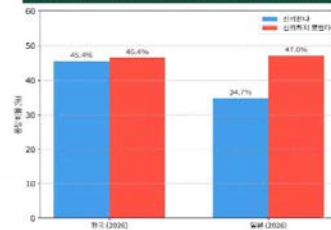
한국과 일본의 대미 신뢰도 비교(2024~2026)

연도	한국 (신뢰 vs. 불신)	일본 (대미 인식/신뢰도)
2024년	신뢰 73.2% 불신 18.2%	미일동맹 지지 60%
2025년	신뢰 66.3% 불신 30.2%	낙관 44.7% 비관 23.6%
2026년	신뢰 45.4% 불신 46.4%	신뢰 34.7% 불신 47.0%

※ 한국측(EAI): 2017년부터 "미국은 신뢰할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가" 항목을 추적 조사

※ 일본측(국제문화회관IHJ/아태구상API):
 - 2024년까지는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중심
 - 2025년 '제1회 한미일 국민상호인식조사' 신설
 - 2026년 EAI-IHJ 공동으로 대미 신뢰도 첫 조사

한일 대미 파트너 신뢰도 비교(2026)



한국의 대미 신뢰도 추이(2017~2026)



동아시아 위기와 한·일 안보협력 인식조사 [2026.7]

※ 출처: 동아시아연구원(EAI)·국제문화회관(IHJ)공동조사(20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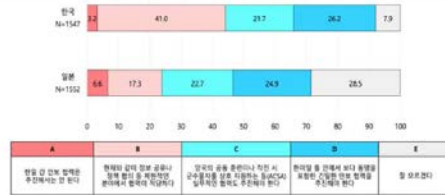
군사적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국가/지역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지지 여부



동아시아 위기 시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지지 이유



이재명 정부의 대일 '투트랙 외교'와 대일 메시지

현재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속에서 '한일 협력관계' 강화를 모색함과 동시에 현무-5미사일원자력추진잠수함 및 K-방산 강화 등을 통해 '자주국방의 기반 구축'을 추진

- ❖ **2025년 8.15광복절 경축사: 한일수교 60주년 계기 신뢰구축 강조**
 - 과거사 직시 촉구: 일본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간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
 - 실용적 대일외교 원칙: 광복 80주년, 한일수교 60주년을 맞아 "서툰외교를 통한 상생협력"을 언급하며, AI시대 등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
- ❖ **2026년 3.1절 기념사: 3.1정신 기반 동북아 평화공영과 일본의 호응 촉구**
 - 서툰외교 정례화: "서툰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 양국 국민의 체감 성과 창출: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일본정부의 전향적 호응"을 기대한다는 메시지 전파
- ❖ **2026년 8.15광복절 경축사:**
 - 한일협력 성과 및 국익외교 지속: 서툰외교 통한 산업-미래세대 협력 평가, 실용적 국익외교로 공동 이익과 과제해결을 지속
 - 국민간 신뢰와 과거사 공감: 지속적 성과 위해 진정성과 신뢰가 필수적, 과거사 피해자들의 고통을 보듬는 노력 필요
 -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 구축: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토대 위에서 진정한 신뢰를 구축'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2026.8.15)



"전사자 추모,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 (다카이지 총리, 8.15연설문)

한일 정상회담: '적대적 제후'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 ❖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2025.10.30):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한반도 및 대북 안보 공조**: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 하에 안보리 결의 이행 및 불법 사이버 대응을 강화"
 - **역내 소통 및 동북아 경제**: "양국 간에 전략적 소통 강화, 안보·경제 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
- ❖ **나라 한일 정상회담**(2026.1.13):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
 - **한반도 비핵화 및 대북 정책**: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
 - **동북아 3국 협력 구상**: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
 - **초국가 치안 공조**: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회에 일본이 참여"
- ❖ **안동 한일 정상회담**(2026.5.19):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그리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도 재확인"
 - **중동 정세, 해상 수송로 및 공급망 안보**: "중요한 파트너"(25.6.16) → "전략적 파트너"(25.8.23) → "운명적 동반자"(26.1.12)
(이재명)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협력을 하심단화하게 논의.
특히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도 한층 강화"
(다카이치)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 행동을 포함한 사태 진정을 도모하고 일·미·한이 동맹을 통한 억제력 등 능동적 노력"
- **한반도 안보 및 대북 정책**:
(이재명)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구축"
(다카이치 총리)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응을 논의하였으며, 일한 및 일·미·한이 연계하여 대응"
- **동북아 안보 구도**: "역내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의 이익을 모색"
- **치안·비군사적 안보 공조**: "양국 경찰청 간에 체결된 '초국가 스캠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각서'"



한·일 안보협력의 유형과 쟁점

한일 안보협력의 유형: 기지제공과 후방지원 및 연합작전

- ❖ **기지제공**: 유엔사 후방기지(UNC-R) 제공
 - 유엔사 후방기지: 한반도 유사시 투입될 미군을 포함한 유엔사 회원국 군대의 집결지 제공... 기지국가 일본
- ❖ **후방지원**: 미일 방위협력지침 및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제도화
 - 정보자산 지원: 탄도미사일 요격작전 및 미사일 발사 조기탐지를 위한 군사정보 교환
 - 상호군수 지원: 정부·민간 자산을 이용한 상호 군수지원
 - 후방작전 지원: 기뢰 제거 소해작전 및 해상수송로 확보, 함선호송 및 선박검색
- ❖ **연합작전**: 자위대의 한미연합연습 참가(일본의 유엔사 회원국 자격)
 - ⇒ 북한의 전쟁공간 확대를 위한 MRBM, IRBM 개발·배치의 구실 제공

cf) 민간인 소개, 전투병 수색 및 구조
재한 일본인 65,216명
(24년 말 추산)

※ 한·미·일 연합훈련: Freedom Edge

한일 안보협력의 쟁점: 안보 기여 vs. 군사개입 빌미

- ❖ **일본의 정찰자산**: 북한 군사동향 뿐만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정찰기능도 동시수행
ex) 군사정찰위성 隼 3+27(衛星群) 30년초 1307) vs. 日 57('29년 97)
북한 17, 중국 1367('15ISIS 2024)
 - ❖ **일본의 해상감시자산**: EEZ, 해상영토 분쟁 시도 때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도 작용
ex) 2019년 1월 자위대 P1, P3초계기의 한국군함에 대한 위협비행
- ⇒ 미일 및 일본의 지역 안보전략 편입 가능성: 한국의 안보 자율성 약화 우려



한일 안보협력의 촉진요인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인식 공유

- 한일은 모두 비핵무기국가로서, '핵선제사용 독트린'을 채택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
- 북한의 비대칭전력 등 다량생산 및 실전배치에 따른 실시간미사일 경보정보 공유와 조기경보 역량의 결합 필요성 증가
-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체결 이후 군사기술 이전 및 군수물자 협력으로 동북아 전략환경의 불안정 심화

❖ 중국발 지정학 리스크 공유

- 중국의 패권적 해양전략에 따라 제1, 2차 도련 내 제해권 추구
- 구단선 설정 등 동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SLOCs)에 대한 통제권을 통한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우려
- * 최근 중국은 대만해협까지 포함한 '십단선(十段線)'을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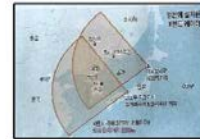


❖ 미국의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제도와 압력

- 캠프데이비드 합의(2023)에서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공약'을 통해 공동위협에 대한 조율 메커니즘 마련
- 한미일 3국의 다영역 합동훈련 '프리덤 에지' 정례화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사무국 설치운영

❖ 포괄적 안보 및 가능성 협력 수요

- 전구미사일방어(TMD) 및 감시정찰 공조: 일본의 조기경보위성,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레이더 자산과 한국의 지상레이더, 그로부터 자산 간 상호보완적 결합을 통해 탐지 사각지대 최소화
- 경제안보 및 신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우주안보, 핵심망물 및 반도체 공급망 보호 등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서는 신기술 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 확대



한일 안보협력의 저해요인

❖ 과거사 인식에 따른 정당성

- 과거사 청산 미흡: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 논란, 일본 지도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은 한국 내 대일 안보협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
-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 및 외교청서 주장은 양국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가로막는 뇌관으로 작동
- 해상자위대의 육일기 계양: 군국주의 상징인 육일기를 계양한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문제

❖ 전략적 우선순위의 위협인식의 비대칭성

- 대북 vs 대중 초점 차이: 한국은 실존적 직접적 위협인 대북 억제력 확보와 한반도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반면, 일본은 '대만 유사'를 포함한 중국의 해양팽창 억제 및 동중국해 방위에 중점
-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문제: 한반도 유사시 미군 후방기지 역할(유엔사 후방기지)을 수행하는 일본 자위대의 영역 진입 시 한국의 사전동의 여부 및 한일 3조(영토조항)와의 충돌가능성이 상존

❖ 군사적 상호 불신과 법제도적 한계

- 현장 충돌 및 돌발 갈등: 2018년 한일 레이더다초계기 갈등과 같은 현장 군사 마찰의 잔여 불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치적 연계 리스크 등이 완전한 신뢰 형성을 저해
- 군수지원 및 집단자위권 범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한 한국 내 거부감과 일본 평화헌법 제제 및 전수방위 원칙의 점진적 완화(반력능력 보유 등)에 대한 경계심이 병존

❖ 국내 정치 환경 및 정책 지속성 결여

- 정권 교체에 따른 대외정책 진폭: 양국 모두 국내 정치적 유불리와 정권 성향에 따라 대일대외 정책기조가 급변하여 협력의 장기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취약
- 국민 정서의 비대칭적 반영: 안보 협력의 실무적 필요성과 국민적 수용성 간의 괴리로 인해 정치권이 적극적인 안보 협력 심화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정치적 비용이 수반



* 한국해군의 일본관함식 참석: 2002, 2015, 2022
* 일본 해상자위대의 한국관함식 참석: 1998, 2008



* 2018. 12. 20, 2019년 1. 18, 1. 22, 1. 23
⇒ 한일 국방장관회담(2023. 6. 4): "핵심규명 없이 재충남지해 마련"

한·일은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나: 몇 가지 과제

과거사문제의 지속가능한 관리

- ❖ 1910년 한일합방조약이 강박에 의해 체결되어 인권무효이므로, 식민지 지배의 자체가 불법임을 인정하는 문제
- ❖ 강제동원피해자, 위안부 등 과거사 갈등을 정전교체와 무관하게 일관되고 제도화된 방식으로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시도 중단

- ❖ 외교청서: 2005년~현재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영토"
 -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를 불법점거" (2018년판부터 포함)
- ❖ 방위백서: 2005년~현재
 -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
- ❖ 국가안전보장전략: 2013년, 2022년
 - 1차(2013.12), 2차(2022.12):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문제

북한지역에 대한 한국 영토고권 인정

- ❖ 일본정부는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임을 불인정
- ❖ 2015년 한일 상호군수협정(ACSA) 체결 과정:
 - 한민구 국방장관이 자위대의 북한해역 진입시 한국과의 사전협의를 요구했으나, 나카타니(中谷) 방위상이 동의하지 않아 결렬

안보협력의 제도화 및 신뢰구축

- ❖ 과거사문제의 전략적 관리를 토대로, 북핵위협 대응과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일 안보협력을 제도화
- ❖ 한일 및 한·일 안보협력이 특정국가를 겨냥한 집단행위기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여내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을 추진

경제안보, 사회적 위기에 공동대응

- ❖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공동대응하는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
- ❖ 초저출생고령화,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등 난제에 대한 정책공조 및 해법공유

국민적 공감대와 민간교류 확대

- ❖ 청년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여론의 지지를 확보해 외교안보적 협력의 정치적 기반과 복원력을 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협력 방안

이기태(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

□ 북일관계 평가: 대립과 단절의 고착화

○ 평행선의 외교 선택법

- 실질적인 외교관계 복원이나 의미 있는 소통 없이 북한의 전략적 선택법과 일본의 신중한 접근이 평행선을 지속함.
- 북한은 대일관계를 일관된 대외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일본은 경계와 억제에 초점을 맞춤.

○ 구조적 정체 상태

- 북일 간 핵심 현안(북핵/미사일, 납치자 문제)을 둘러싸고 실질적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 경향이 강화됨.
- 위기관리적 성격이 뚜렷해지며 극적 반전의 가능성보다는 안보 불확실성이 지속됨.

□ 북러 밀착과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

○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

-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체결(2024) 등 북러 간 군사외교 협력 강화가 일본의 안보 우려를 심화시키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함.

○ 일본의 안보 우려 증대

- 북러 밀착은 기존 중국 위협과 더불어 일본 내 ‘군사안보 강화’ 논의(2022년 안보

3문서 개정)를 급격히 자극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대됨.

○ 한미일 3각 안보협력 대응

- 일본 내에서는 북중러 3각 밀착에 대비하여 미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됨.

□ 북한의 대일 비난 및 외부 환경 연계

○ 미국-우크라이나-이스라엘-일본 연계 비난

- 북한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러-우전(러시아 연계), 중동 정세(이스라엘-미국 구도)를 결합하여 한미일 진영을 강하게 비난함.

○ 일본에 대한 반감 표출

- 북한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군사적 연대를 과시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 축인 일본에 대해 적대적 기류와 강한 비난을 지속적으로 표출함.

□ 남북관계 단절과 북일관계의 연동성

○ ‘적대적 두 국가’ 선언

- 북한은 남북관계에서 통일, 민족 용어를 완전히 삭제하고 ‘남북 양국 체제’ 노선을 견지하며 남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대외전략을 취함.

○ 일본의 관망세 유지

- 일본은 한국의 남북관계 단절 및 역할 변화와 일정 부분 연계하여, 북일 협상 환경을 관망하는 소극적 태도에 머무름.

○ 경제, 인도 지원 부재

- 북한의 자립경제 강조와 일본 내 대북 지원 여론 약화로 공식적인 경제협력이나 인도지원 논의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 다카이치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강경 안보

○ 안보 3문서 조기 개정 및 방위비 증액

-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취임 직후 '안보 3문서' 개정 지시 및 방위비 GDP 2% 이상증액을 추진하며 군사력 강화에 매진함.

○ 반격 능력 강화 및 방위산업 육성

- VLS(수직발사장치) 탑재 원자력 잠수함 개발 등 군사적 대응 태세를 대폭 확대하고, 수출 규제 완화와 국영 방위장비 공장 설립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함.

□ 다카이치 정부의 외교전략: 억제와 압박 중심

○ '강한 일본' 전략

- 실질적 대북 협상보다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억제, 압박 강화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춤.

○ 강경한 비핵화 전제조건

-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유연성 없는 강경한 전제조건을 고수하여 외교적 타협 여지를 축소함.

○ 지역 안보 연계

- 중국과 대만 문제 등 지역 안보 긴장 고조 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존립위기사태')을 공식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임.

□ 북일관계 전망: 구조적 정체 지속

○ 납치자 문제의 국내정치화

- 일본의 '메구미 신화' 등 확고한 생존 귀환 요구와 북한의 '이미 해결된 사안' 입장 차이가 극복 불가능한 장벽으로 작용함.

○ 보수강경파의 한계

- 일본 내 납치자 가족 및 보수강경파 세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대북 유화 정책 수용(이시바 전 총리의 평양-도쿄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이 원천적으로 제한됨.

□ 역대 내각의 ‘대화과 압박’ 기조 유지의 한계

- 조건 없는 정상 간 만남 표명
 - 아베 정부 이후 역대 내각과 마찬가지로 대화 의지를 표명하나 실질적 조건 충족은 요원함.
- 제3국 실무접촉 가능성
 - 몽골, 싱가포르 등 제3국을 통한 비공식 외교채널이나 실무접촉 가능성은 상존하나, 공식 복원은 힘들.
- 제3국 실무접촉 가능성
 - 경직성 심화: 동아시아 안보환경 악화와 일본의 방위력 강화 정책이 맞물려 북일 관계 개선 기대를 크게 감소시킴.

□ 김여정 담화 분석: 북한의 새로운 군사선택안 시사

- 일본의 변신에 대한 경고
 - 김여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과 군사지도부는 오늘날 일본의 변신에 따르는 분명한 군사적 선택안을 추가설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위임에 따라 분명히 밝힌다”고 담화를 통해 경고함(2026.8.5.).
- 안보 위협 고조에 대한 대응
 - 다카이치 정부의 군사력 증강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일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대일 타격 작전계획 수립 가능성과 쉼법

- 타격 대상 확대
 - 북한은 기존 한미 대상 핵 공격 작전계획에서 나아가, 일본 주요 기지를 타격 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음.

- 한반도 유사시 개입 차단
 - 일본의 군사적 개입 의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억제하겠다는 강한 전략적 의지를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당중앙군사위 지도 공개
 - 향후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 등을 계기로 일본을 타격 대상으로 명시한 작전계획 지도를 전격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됨.

□ 이재명 정부의 대일 협력과 김정은의 딜레마

- 한일 간 협력 확대의 파급효과
 - 이재명 정부 하에서 한일 간 안보 및 외교적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부각됨.
- 김정은의 복잡해진 셈법
 - 한미일에 더해 한일 간 전략적 연계가 강화되는 흐름은 북한 지도부의 작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대남, 대일 대응 전략을 크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

□ 역사적 사례 교훈: 북미일 관계의 상관성

- 미국의 관여 축소 시기
 - 역사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가 축소되거나 공화당 정부 등장 시 일본이 독자적인 북일 접근을 시도하는 경향이 나타남.
- 한미일 공조와 대화의 연동
 - 역으로 한미일 협력체제와 한일관계가 공고화되고 안정화되었을 때 일본이 대북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확대됨.
- 한국의 중재자 역할
 -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때 일본의 대북 접근 공간이 확장되며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선순환이 형성됨.

□ 일본의 '상황대응형 외교' 전환 대비

○ 미국발 북미 접촉 시 일본의 독자 행보

-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접근 등 급격한 정세 변화 시, 일본은 북미 대화를 중재하거나 직접 북한과 대화에 적극 나서는 전통적 반응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정부의 선제적 인지

- 일본이 언제든지 독자적 대북 정책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냉철하게 인지하고,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유연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함.

□ 한미일 공조와 상시 소통 채널 구축

○ 대북 공조 체제 견지

- 한미일 3국 간 강력한 안보 공조 및 억제력을 유지하여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고 안보적 안정성을 확보함.

○ 일본과의 상시 소통 채널 유지

- 다카이치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서도 언제든지 양국 간 대북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외교 채널을 상시 가동함.

○ 역내 불확실성 관리

- 북일 간 비밀접촉 및 급변하는 외교 환경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함.

□ 이재명 정부의 '중개자, 매개자' 역할 모색

○ 한미일 협력 구도의 지렛대 활용

- 공고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다카이치 정부의 대북 정책을 연착륙시키고, 북일관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외교적 통로를 확보함.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 북일 간 협상 창구로서 한국이 적극적인 중재자(매개자) 역할을 자처하여 동북아 평화 번영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대화 국면을 주도함.

□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세부 실천 과제

- 인도적 지원 및 신뢰 구축 연계
 - 납치자 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하여 일본 내 대북 대화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방안 지원
- 제3국 비공식 채널 활용 지원
 - 몽골, 싱가포르 등 제3국을 통한 북일 실무접촉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한일 간 사전 조율 체계 마련
- 역사 청산과 평화 체제 조화
 - 북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거 청산 및 경제협력 논의를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과 유기적으로 결합

□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 원칙 있는 대북, 대일 투 트랙 외교
 - 안보 억제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어 일본의 돌발적인 대북 접근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는 주도적 외교 전개
-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 강화
 -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안보, 경제 전반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 북일관계 변화를 한국 주도의 평화 기제로 전환

□ 결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로 나아가며

- 구조적 정체의 전략적 돌파
 - 북일관계의 구조적 정체와 다카이치 정부의 강경 기조 속에서도 유연한 외교로 한반도 평화의 공간을 창출해야 함.
- 한국의 주도적 역할
 - 한미일 공조와 남북 평화의 균형점을 찾아 북일관계 개선을 한반도 평화 번영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함.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한일평화포럼 공동 세미나

한반도 평화공존과 한일협력 방안 모색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한일평화포럼